



서정민 사회

2015년도 국가직(9급) 공채 임용시험

[사회] 문제/해설

꿈의 크기가 자신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정민 공무원 고시 연구소 www.cafe.naver.com/uriminlab

<총평>

1.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 법과정치 10문제, 사회문화 5문제, 경제 5문제가 출제되어 국가직에서는 계속해서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문항 번호	출제 내용		
	과목	단원	출제부분
1	법정	2	국회의원 선거-지역구와 전국구 의원
2	법정	3	국회의 기능
3	법정	1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4	법정	6	베스트팔렌 조약
5	법정	1	사회계약설
6	경제	5	국제수지표
7	경제	2	수요와 공급의 균형
8	경제	2	시장의 균형
9	경제	4	고용관련 지표/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0	경제	4	로렌츠 곡선
11	사문	4	계층화 현상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12	사문	3	문화접변
13	사문	1	연구방법-양적 연구
14	사문	2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
15	사문	2	관료제의 특성
16	법정	3	대통령 임명시 국회 동의를 필요한 기관
17	법정	5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18	법정	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9	법정	3	기본권
20	법정	4	불법행위

단원 과목	I	II	III	IV	V	VI	계
법과정치	2	1	3	1	2	1	10
경제		2		2	1		5
사회문화	1	2	1	1			5
합계							20

2. 난이도와 경향

①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중하정도로 낮았다.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들이라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다만, 경제에서 고용 관련 지표, 1차 방정식의 수요-공급곡선을 묻는 문제 때문에 당황한 수험생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2문제만 제외하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② 법과정치

- 상속계산 문제나 표 문제가 없어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다.
- 고대 아테네, 베스트팔렌 조약 등은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물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기본적인 지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다.

③ 경제

- 고용관련 지표가 다소 까다롭게 풀었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곡선의 1차 방정식 문제도 생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는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강의 중에 중요한 것으로 강의한 것이 적중되었다.
- 국제수지표도 항목에 들어갈 내용 정도만 공부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

④ 사회문화

-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고, 흔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만 출제되었다.
- 계층이동 문제나 가족의 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향후 공부 전략

① 각 과목별 중요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에서

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 ②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구라고 부르는 이유, 1인 2표의 의미, 아테네에서의 추천의 의미, 관료제의 영어식 표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등 개념을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③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경시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해설] 법과정치 [2단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정답②

- ① (○)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중복해서 출마할 수 없다.
- ②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구 국회의원이다. 전국의 유권자 표를 모두 합쳐서 정당득표율을 계산한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 오히려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권역별로 선출한다.
- ③ (○) 지역구 국회의원은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어, 사표 발생이 많다.
- ④ (○) 1인 2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은 상호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출한다.

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기능
- ③ 입법기능 재정기능
- ④ 재정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해설] 법과정치 [3단원] 국회의 기능 정답①

(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고, (나)는 국정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이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천제, 운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① 민회는 추천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 ③ 추천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 ④ 추천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해설] 법과정치 [1단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이해 정답③

- ① (×) 민회는 폴리스 구성원이면서 20세 이상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의결기관이다.
- ② (×) 민회는 직접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의회'라는 대표기관 자체가 없었다.
- ③ (○) 전문성을 중시하면 선거를 해서 뽑아야 한다. 추천제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제도이고, 이는 누구에게나 공직 담당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 ④ (×)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으나, 배심원은 추천으로 뽑았다.

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법과정치 [6단원] 베스트팔렌조약 정답④

베스트팔렌조약은 독일의 30년 전쟁(종교전쟁)을 끝내고 맺은 강화조약이다. 이로써 근대 민족단위의 주권국가가 등장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태동이 되었던 조약이었다.

- ㄱ. (×) 신교와 카톨릭 모두 동등권을 갖게 함으로써 기존의 우월적 존재인 교황권을 군주권과 동일시 하게 되었다.
- ㄴ. (○) 근대 주권 국가의 개념을 확립한 조약이었다.
- ㄷ. (×) 국제기구 설립이나 평화 유지 합의 등은 없었다.
- ㄹ. (○) 독일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이었다.

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해설] 법과정치 [1단원] 사회계약설 정답④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다.

- ① (×) 홉스의 인간관은 성악설이다.
- ② (×) (가)의 홉스는 군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나)의 로크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로크가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한다.
- ③ (×)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다.
- ④ (○) 로크는 저항권을 주장함으로써 시민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억 달러)

항목	2013년	2014년
상품 수지	80	50
서비스 수지	10	-10
본원 소득 수지	-10	10
이전 소득 수지	-5	5
금융 계정	20	10
자본 수지	-5	5

-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해설] 경제 [5단원] 국제수지표 정답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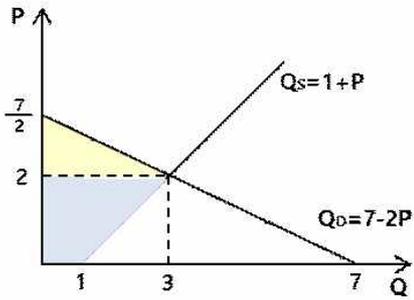
- ① (×) 증권투자는 금융계정에 포함된다. 자본수지에는 해외이주금, 지적재산권의 매매 대금이 포함된다.
- ② (○) 2013년은 경상수지는 75억 달러, 자본금융계정은 15억 달러로 90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은 경상수지는 55억 달러, 자본금융계정은 15억 달러로 70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2014년 외환보유액은 90억 달러 + 70억 달러 = 160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③ (×) 2013년, 2014년 모두 경상수지는 흑자였다.
- ④ (×) 2013년, 2014년 모두 자본금융계정은 흑자였다.

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수요곡선: $QD = 7 - 2P$
- 공급곡선: $Qs = 1 + P$

-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해설] 경제 [2단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균형 정답①



위 그림에서 균형가격은 2, 균형거래량은 3이고, 균형가격 2 위의 삼각형 면적이 소비자 잉여, 아래 사다리꼴 면적이 생산자 잉여이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이 사회적 잉여이다.

- ① (○) 시장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다. 따라서 $7 - 2P = 1 + P$ 이고, 이를 계산하면 $3P = 6$, 따라서 $P = 2$ 이다.
- ② (×) 소비자 잉여는 $9/4 = 2.25$ 이고, 생산자 잉여는 4이다. 이를 합한 값인 사회적 잉여는 6.25이다.
- ③ (×) P에 2를 대입하면 $Q = 3$ 이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3이다.
- ④ (×) 소비자 잉여는 $9/4$ 이고, 생산자 잉여는 4이다.

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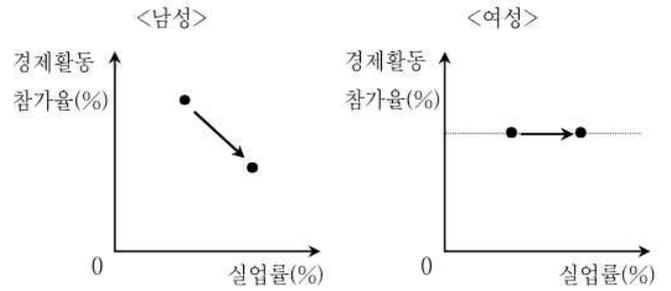
-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해설] 경제 [2단원] 시장의 균형점의 이동 정답①

(가)에서 대체재인 라면의 가격이 상승하면 햄버거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나)에서 햄버거 생산 공장 부지의 임대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인상되어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동 후에는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는데,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나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해설] 경제 [4단원]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정답④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노동가능인구 × 100이고, 실업률 = 실업자 수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100이다. 이 문제에서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다는 조건을 유의해야 한다.

- ①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면, 남성의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 남성의 실업률은 증가했기 때문에 남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여야 한다. 만약 남성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함이 없다면, 남성의 실업자 수는 반드시 감소하여야 하는데, 남성의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 남성의 실업률이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②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 + 실업자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려면 여성 실업자 수는 증가하여야 한다.
- ③ (×) A국의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다면, A국 전체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야 한다. 노동가능인구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④ (○)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해설] 사회문화 [1단원] 양적 연구 방법 정답①

위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함양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이다.

- ① (×) 가설에서 사용한 ‘자원봉사 활동’, ‘시민의식 함양’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한다.
- ② (○) (가)는 문제인식, (나)는 정책적 건의이다. 모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 ③ (○)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가설이 옳다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 ④ (○) (가)는 문제인식, (나)는 결론이후의 정책에의 제언, (다)는 검증 및 결론, (라)는 가설 설정, (마)는 자료 수집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의 순서는 (가)-(라)-(마)-(다)-(나)이다.

1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성성보다 우선한다.
-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해설] 사회문화 [2단원]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 정답③

제시문은 사회계약설이고, 이는 사회명목론의 이론적 토대이다.

- ①(×) 사회실재론이다.
- ②(×) 사회실재론이다.
- ③(○) 사회명목론이다.
- ④(×) 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의 이론적 근거이다.

1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해설] 사회문화 [2단원] 관료제와 탈관료제 정답②

제시문은 관료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① (×) 탈관료제의 특성이다.
- ② (○) 관료제의 특성이다.
- ③ (×) 관료제는 의사결정권이 고위직에 있으며,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 ④ (×) 탈관료제인 팀제, 아메바형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1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 ① 대법관 임명
- ② 법무부장관 임명
-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해설] 법과정치 [3단원] 국회의 동의권 정답①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뿐이다. 장관, 국가정보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일 뿐이다.

1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① 폭행
- ② 협박
- ③ 강간
- ④ 유기징역

[해설] 법과정치 [5단원] 형법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정답④

법해석은 사건에 법률을 적용할 때 법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다. 강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강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형별인 유기징역은 법 해석에 들어가지 않는다.

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해설] 법과정치 [5단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답②

- ① (○) 사전적 구제제도에는 청문, 민원 등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 ② (×)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판단한다.
- ③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법원'이 판단한다.
- ④ (○)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판결은 처분청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1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해설] 법과정치 [3단원] 사회권의 특성 정답④

제시문의 교육권,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환경권 등은 모두 사회권이다.

- ① (○) 사회권은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② (○) 사회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실정법상 권리이다.
- ③ (○)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근로3권은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④ (×)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20.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법과정치 [4단원] 불법행위 정답③

- ①②④는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 ③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